

화요세평

강정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장



한동안 방탄소년단의 군입대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했었다. 당시 내 주변 지인들과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다. 방탄소년단의 군입대와 관련해 공정성, 국위선양, 경제효과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찬반의견이 오갔다. 나는 직업이 직업인이라 자연스레 누군가가 던진 “경제효과가 과연 얼마나 된다고?”라는 질문에 가장 관심이 갔다.

한류 수치, 첫 10억 달러 돌파

K-팝, K-드라마 등 소위 한류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더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그럼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효과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통계 중 하나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제수지가 있다. 일정 기간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경제적 거래를 기록한 통계인 국제수지에는 다양한 세부 항목이 있는데 이중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치’를 보면 대략 한류 콘텐츠의 수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치는 TV 프로그램, 영화, 라디오, 뮤직컬, 음원 등의 문화 콘텐츠와 관련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과 해외에 지급한

자금을 비교한 것으로 이른바 ‘한류 수치’로도 불린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입은 17억 달러로 2021년의 11억5,000만 달러보다 48%나 급증했다. 반면 관련 해외 지급은 4억7,000만 달러에 그쳐 우리나라는 지난해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치가 12억3,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이자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긴 수치이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류 수치의 흑자 확대는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로 기인하고 있다고 한다. 방탄소년단뿐 아니라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많은 국내 아이돌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앨범, 음원 등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넷플릭스 등 OTT 시장의 확대로 국내 영화와 드라마가 글로벌시장에 자연스럽게 공급되면서 수출 효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1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시청 1위 기록을 세웠고, 2022년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넷플릭스에서 주주간 전 세계 시청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잇따른 성공에 넷플릭스뿐 아니라 디즈니+, 애플TV+ 등 거대한 자본력을 지닌 글로벌 OTT 기업들이 K-드라마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서 당분간 한류 수치 흑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이라고 한다.

이는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와 IT 업종의 불황 등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경상수지의 흑자폭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상수지는 국제수지의 주요 항목으로 반도체 등 일반상품의 수출입을 기록한 상품수지와 운송, 여행

등의 국내외 수입과 지급을 기록한 서비스수지 등을 포함한다. 한류 수치가 포함된 서비스 수지는 지난해 여행수지 적자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한편 한류 콘텐츠의 수출은 단순히 국제수지 개선 효과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자료에 따르면 음악, 방송, 영화 등 한류 콘텐츠는 해외 소비자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소비재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연구 결과,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가공식품과 같은 소비재 수출도 4억6,000만 달러 동반 증가한다고 한다.

미래 수출품목 다양화 필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그동안 상당 부분 수출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기둔화 등으로 국제교역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간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문화 콘텐츠, 지적재산권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긴 하지만 문화 콘텐츠는 단순 상품 수출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소비재 수출, 관광객 유입 등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어린애들의 문화, 혹은 가벼운 대중문화 등으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주요 수출산업으로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때이다.

면세포기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세사업자는 운송료, 포장비 등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원가에 산입해 가격경쟁력이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하는 경우와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세포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인적사항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면세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용된다.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므로 일시적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면세 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하며, 3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해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광주국세청 제공

봄철 캠핑, 안전하게 즐기자

두 번째, 전기제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캠핑 시 요리 및 난방을 위해 부득이하게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개의 전기 제품을 하나의 콘센트에 문어발처럼 연결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전기 플러그와 콘센트에 물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멀티탭 등을 사용할 때는 정격용량을 준수해 사용해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들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캠핑 시 불을 피우기 전에 소화기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캠핑장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불을 사용해야 하며, 불을 다 피운 후

에는 남은 불씨는 물을 충분히 뿌리거나 주변 모래나 흙으로 덮여 꺼야 한다.

마지막으로, 담배꽂초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성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캠핑장 특성상 주변에 풀이 많고, 현재와 같이 강수량이 적은 시기에는 더욱 건조해 들불화재에 더욱 취약한 시기이다. 이를 인지하고 담배꽂초 던진 등 부주의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썼으면 한다.

캠핑인구 700만 시대! 우리는 이러한 예방수칙을 숙지에 캠핑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캠핑이 될 것이다.

/오송학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소방사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5-7721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뉴미디어본부	(062) 720-1006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위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 군공항 특별법 다음달 통과 기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2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상정되지 못해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어렵게 됐다. 법사위는 특별법이 상임위의결 이후 필수 숙려기간인 닷새가 지나지 않아 상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구·경북지역은 이르면 이번 달 특별법 통과를 자신했으나, 결국 다음달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쌍둥이법인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다음달 4~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동시 통과가 유력하다. 그동안 광주와 대구는 두 지역 공항 특별법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에 힘으로 모아왔으나 대구쪽 신공항 특별법이 먼저 상임위에서 통과하면서 대구·경북은 우선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내심 기대해왔던 게 사실이다. 그랬으면 동시 통가를 촉구해온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으로선 매우 웅색

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여하튼 광주와 대구 신공항 특별법이 동시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다행이다. 두 지역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 방식인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겨 있다. 물론 특별법이 통과하더라도 광주의 경우 전남지역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 기존 군 공항부지 활용 방안 등과 관련한 다양한 과제가 놓여 있다.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개발이 본격화하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와 대구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반드시 다음달 특별법 동시 통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 최대 현안사업이 중앙 정치권의 극한 대결로 더 이상 타격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와 대구 지자체의 협력은 물론 여야 지도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꼭 특별법 통가를 이뤄내 지역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창출,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재외동포청 유치 지역 정치권 나서야

광주시의 재외동포청 유치 작업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외교부가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설립 여론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재외동포청은 730만명의 해외 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난 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출범 절차를 밟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로 신설된다. 재단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8년 서울에서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한 상태다. 하지만 동포들이 서귀포까지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해 다른 지역이 검토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약 150~200명의 인력이 상주하고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수많은 해외동포의 지역 방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광주시는 정부조직법 개정 직후 곧바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사회적 자본과 인권 도시로서 해외 네트워크가 풍부하다는 점, 이주인 포용과 사회통합의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이뤘다는 점,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이 없는 광주에 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고려인 동포를 최초로 받아들여 광주 고려인 마을을 조성한 점도 강조했다. 세계적 민주·인권 도시로서의 관련 국제기구, 도시 간 활발한 교류와 연대, 매년 세계인권 도시포럼 개최 도시임도 내세웠다.

하지만 광주 유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외교부가 편의성과 접근성을 이유로 서울이나 수도권 설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자체와의 뜨거운 유치 경쟁을 뚫어낼지도 미지수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인천시다. 특히 인천을 지역 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계부처 방문, 중앙부처 인맥 동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반면 광주는 지역 정치권에서 관련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한다. 지역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도 부족할 판이다. 재외동포청 유치 당위성 확보를 위한 광주시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지역기업제품 우선 구매 노력을

기지사첩

홍승현

경제부 기자



지역 공공기관 거래 중소기업들이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동반성장 지원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 18개 기관의 지난 2022년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은 전체 중기제품 구매 실적(9조 2,213억)의 14.5%인 1조 3,400억원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한국전력공사의 구매액이 8,532억으로 63.6%를, 농어촌공사는 4,142억으로 도내 구매 비율의 30.9%를 차지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전체 구입액 대비 지역 기업 물품 구매 실적은 초라하다. 두 기관의 전체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6조1,665억·2조 6,379억 중 도내 구매 비율은 각각 전체 금액의 13.8%·15.7%에 불과했다.

도내 기업 제품 구매율이 가장 적은 곳은 한국인터넷진흥원(2.3%)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3.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3.6%), 국립전파연구원(4.5%) 순이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나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동반성장 지원 노력 체감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208개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전남 공공기관 거래(희망) 중소기업 경영애로 실태조사’ 결과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노력 정도에 대해 조사 대상 기업 37.5%는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노력에 대한 체감도는 ‘어느 정도 노력한다’가 63.0%로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노력하지 않는다’도 22.6%가 답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 추진됐다. 지역 소멸화 예방·균형발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도 뒤따른다. 공공기관이 이를 저버리고 지역 중소기업을 외면한다면 영세업자들의 생존에도 문제가 생기고 경제 침체, 지역 소멸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 발전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판로 지원 역할 등 인식 개선을 기대해본다.